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자 금호아시아나 선정

자산 19조원... 재계 8위 급부상

올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 대우건설을 22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거머쥔에 따라 앞으로 재계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자회사인 금호산업과 대우건설을 합쳐 최강의 건설그룹으로 탈바꿈하게 됐고, 건설분야를 그룹의 차기 성장동력 중 하나로 키울 수 있게 됐다.

독자브랜드 유지... 금호산업과 합병안해

삼성물산 제치고 건설부문 최강자 도약

◇금호 재계 8위로=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대우건설 인수후 그룹내 건설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재계 순위 10위권 이내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 총액순위에 따르면 현재 재계 11위인 금호아시아나그룹(자산 12조9천820억원)이 자산 5조9천780억원인 대우건설을 인수하면 두산그룹을 추월하고 경쟁사인 한진그룹(7위)에 이어 재계 8위로 뛰어오른다.

금호는 또 대우건설 인수에 성공하면서 그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대 지주회사 체제 개편작업도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호아시아나그룹내 화학제품과 타이어·항공·렌터카·고속버스에 이어 건설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업계 1~2위의 위상을 확보하게 돼 사업 포트폴리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건설부문 최강자 도약=건설업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일한 건설 자회사인 금호산업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9위로, 2위인 대우건설과 합병할 경우 삼성물산을 제

고 1위로 급부상한다. 두 회사가 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2개 건설사를 포진시킴으로써 관공공사나 탄키공사 등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금호산업과의 탄키공사나 개발사업의 파트너로 꾸준히 일해왔고, 최근에도 경기도 한류유드, 신도원 테크노마트 등의 사업에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함께 일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 입장에서 무엇보다 취약한 해외건설 사업에 날개를 달게 됐다.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회사들의 참여가 부진한 리비아·나이지리아·가나 등 아프리카와 카타르·오만 등 중동 지역에서 플랜트·발전설비 공사로 두각을 나타냈다. 대우건설의 LNG 탱크 시공실적은 세계 1위다.

또 석·박사, 건축사, 기술사 출신 등 600여명에 달하는 대우건설의 우수한 인력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게 됐다. 올 초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공개적으로 "대우건설의 우수인재들을 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진행 순탄치 않을 듯=그러

나 치열했던 인수전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진행될 확인실사와 분할상과 정 역시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변경과 인수가격 유동성을 두고 특별설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달말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다음달 한달간 진행될 우선협상대상자의 확인실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6조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인수 가격을 최종 조율하는 분할상과정에 서로 채권단과 금호그룹간 치열한 줄다리기로 예상된다. 결국 오는 9월 매대금 수령과 주식교부를 통한 매각 완료까지 당분간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호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대우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희생으로 희생한 기업의 매각절차"라면서 "금호측은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따랐으며 각종 의혹과 루머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Q & A

저소득 근로자에 年 80만원 지급

2008년 시행... 1,700만원 이하 31만 가구 일용직 적용 받으려면 '지급조서' 제출해야

조세연구원은 22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연 1천7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80만원의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EITC 급여액은 부부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소득은 총소득에 포함, EITC 적용 배제기준으로 이용한다.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가구 기준은.

정부는 이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오는 2008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설명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EITC 적용대상은.

▲우선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 지급대상은 근로소득자로 제한한 것은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부작용 등에 관해 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적용대상 여부를 알기 어렵다. 단계를 밟아 완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수급단위는 가구인가.

▲그렇다. EITC는 가구단위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부부와 부양아동으로 구성된 가구를 기본 적용대상으로 본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타당성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 외 부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시행 초기에는 아동수를 기준으로 아동 2인 이상 부양가구로 한정한다.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을 넘어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가구가 대상인데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인이 임금종사자로 일하면서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부부 공동사업은 현재 배는 걸로 돼 있다. 소득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검증하기가 어렵다.

-지급조서가 제출인되는 일용직은 포함되나.

▲대상이 안된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일용직에 대해 지급조서 받고 있다. 내년까지 지급조서를 받고 소득이 어느정도 파악되면 일용직도 포함될 것이다.

-전면 시행단계는 언제쯤인가.

▲사업자까지 포함하려면 정부의 사업자 소득과 단계가 선행돼야 한다. 201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용직의 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보조금 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EITC를 추가하는 것이다.

-예산 소요재원은 얼마인가.

▲부양아동이 2인 이상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단계에서는 31만 가구에 연간 1천500억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양아동 1인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고 무주택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연간 4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까지 확대할 경우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으로 소요재원 감당할 수 있나.

▲1, 2단계에서는 자연 세수 증가분으로 감당할 수 있다. 다만 3단계 이상 시행되면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일을 안하다 7월부터 일하는 사람은 언제부터 급여를 지급받나.

▲소득신고가 연간단위이기 때문에 급여도 연간단위로 지급한다. -연제부터 시행하나.

▲올해안에 정부가 법을 마련해서 국회를 통과, 200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보험 안내장이 약관보다 우선”

금감원 분쟁조정실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안내장과 보험약관의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안내장의 효력이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위험한 운동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 규정을 근거로 사망자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해와 질병 등이 보장되는 의료보장보험에 가입한 K씨가 최근 취미활동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다가 추락사로 사망하자 부산에 사는 K씨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실은 모집인이 계약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사용한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보험약관 규정과 다른 경우 보험안내장의 효력이 약관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소 이진기술개발사업 65개 업체에 42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이진기술개발사업 대상으로 65개 업체를 선정, 총 42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75% (최고 1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HDD검사장비 개발업체인 맥스는 이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매출액 55%, 고용 37.5%가 각각 증가하는 등 사업 참여업체의 성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08개 업체에 372억원을 지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2006대한민국대학생광고경진대회(광주·전라·제주지역)가 22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위직량기자 jrwi@

미래 서비스산업 문화·교육·물류가 주도

産銀, 미래 유망업종 분석
앞으로 한국의 서비스산업을 이끌갈 유망업종은 뭘까. 22일 산업은행이 펴낸 '미래성장엔진 한국의 서비스산업'에 따르면 의료·교육·관광·문화·물류·유통·e비즈니스·디자인·컨설팅 등 9개 업종이 향후 지식기반경제를 이끌갈 주도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문화산업·소매업·e비즈니스·디자인은 앞으로 10%를 초과

Table with 6 columns: Job Title, Department, Salary/Experience, Start Date, End Date, Contact Info. Includes roles like HR, Marketing, and Sales.

産銀, 지방 수출중소 특별운영자금 지원

여수서 여신고객 CEO 간담회... 환 리스크 관리 5천억 제공

산업은행이 원화강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방소재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섰다. 산업은행은 22일 여수에서 대한조선 신현태 대표이사 등이 지역 기업대표들을 초청, '여신고객 CEO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의 환 리스크 관리방안과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는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22일 여수시내 한 식당에서 여수지역 기업체 대표 30여명을 초청해 '우수여신고객 CEO초청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산업은행 김영기 지역금융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소재 수출 중소기업의 환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운영자금 5천억원을 새로 설정하고 환 리스크 무로자본, 각종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간담회를 마친뒤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대한조선을 방문, 이 회사가 해남군 화원면 일대에 추진중인 조선소 건설과 선박수주지원을 위해 '선수금환급보증'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4천~

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은 올해도 중소기업에 6조원을 포함해 총 25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달 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28.9% 증가한 1조9천741억원의 중소기업

자금을 신규로 지원했다.

대한조선과 메이아용출전력 등 52개 거래처에 4천억원의 여신잔액을 보유한 산은 여수지점도 올해 1천235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im Dae-hwan, former Labor Minister, with a photo and text: "노사배타적 이익에 집착... 노동정책 일관성 결여" 김대환 前 노동장관 노·사·정에 '쓴소리'

지난 2월 퇴임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를 비판하고 노사와 정부 모두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성년의 한국 노사관계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의 월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1987년 이후 노사관계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정책과 정부 권위의 훼손을 초래했다"며 "여전히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세력화된 노동운동은 과거 피해의식과 과도한 정치화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도 미분급으로 대중 고비를 넘기기에만 급급했다"며 노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아울러 "이 와중에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만 놓아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